KoFID Newsletter

특집호
2012. 1

목 차 ▸▸

02 KoFID 뉴스레터 특집호

03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행사 스케치
주요 워크숍

07 KoFID 주제분과
이슈브리프

10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행사 스케치
미디어 스턴트
기자회견

13 특별기고문
부산총회를 다시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후퇴'가 우려된 부산총회의 젠더 협상

15 부산총회 결과문서
부산 파트너십
KoFID 논평
시민사회 평가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뉴스레터 특집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특집호를 준비했습니다. 특집호에는 부산총회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주요 워크숍과 핵심적인 논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더불어 부산총회 기간 중 있었던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부산총회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 대해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산총회의 결과물인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부산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평가를 살펴보고 개발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 인사말 –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이룬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KoFID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을 준비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KoFID는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 협상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였고, 그 결과를 매 호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알렸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KoFID 주제분과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부산총회에 대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국제 개발협력의 핵심 아젠다 형성에 한국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부산총회 준비기획단, 특임장관실, 자원봉사와 캠페인을 통해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이와 같이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다양한 분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번 행사가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에 좋은 경험과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KoFID 활동에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봉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BCSF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2011년 11월 26일 ~ 2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전 세계 개발원조 시민사회단체가 2011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모여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을 개최하였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가장 큰 행사인 부산총회에 대응하여 열린 세계시민사회포럼은 400여명의 해외 참가자와 200여명의 한국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은 국제 개발원조 단체들의 만남의 장이자, 부산총회 개최 직전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였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참석자 중 300여명은 연이어 개최된 부산총회에 공식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시민사회 대표가 시민사회 포럼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개별 참가자들 역시 주제별 워크숍에 참가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아크라회의(제3차 OECD 고위급회담)이후 부산총회(제4차 고위급회담)의 개최까지 전 세계 시민사회는 국가별, 대륙별로 주요 개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사회는 OECD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 참가하여 각 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총회에서 채택될 부산 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3일간 진행된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은 부산결과문서 최종안을 검토 · 평가하고 인권, 보건, 환경, 젠더, 노동, 개발원조 원칙 등의 주제에 관한 워크숍과 대륙별 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은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개발 실현 방안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한국 시민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세계시민 사회포럼이 끝난 후에 'BetterAid'와 'KoFID'는 일련의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스턴트를 통해 부산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 김강이, 김동은 김미란, 김훈, 류진숙, 성지헌, 이미선, 전형진, 정성윤, 정훈재, 최윤호, Moctar

기록봉사자 : 성공회대학교 MAINS 학생, 권유선, 김나연, 서은교, 양은선, 정은주, 배은혜

워크숍 1

부산총회 이후 국제개발 의제의 방향 : 리우+20과 MDGs의 미래

이성훈 KoFID, 한국인권재단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의제전환이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어떻게'에서 '어떤 개발인가'라는 문제로 주제가 심화·확대되었다. 원조를 기존의 촉매 역할을 넘어 지렛대 역할로 이해하면서 개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의 패러다임과 체제(architecture)에 대한 논의가 국제개발 담론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했다. KoFID는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부산총회 이후 개발 분야의 국제시민사회가 어떤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본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주요 국제개발 구호단체와 네트워크인 CONCORD, Oxfam, Social Watch, World Vision, GCAP, LDC Watch, Beyond 2015 그리고 대표적인 국제시민단체인 CIVICUS와 유엔의 사회발전연구소 대표로 이루어진 패널은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평가,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리우환경회의 20주년 (Rio+20) – 그리고 2015년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대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본 워크숍의 주요 논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총회에서 이룬 시민사회의 성취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원조분야에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경향과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감시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MDGs는 모든 국가가 책무성을 지니는 보편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결과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셋째, 콜롬비아 정부가 Rio+20 회의 의제로 제시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는 보편주의와 환경적 이슈를 개발의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치가 있다.

2015년 MDGs 이후의 국제 개발 패러다임과 프레임워크는 현행 신자유주의 경제개발모델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비판과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 단순하게 가난을 극복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및 국가간에 행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개념화한 UDG(Universal Development Rights)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워크숍 2

인권과 개발협력 : 약속에서 실현으로

양은선 앰네스티인터네셔널 한국지부

'인권과 개발협력 : 약속에서 실현으로(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rom Commitment to Reality)' 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열렸다. 포럼아시아, Dignity International, 참여연대, KoFID 인권분과가 함께 준비한 이번 워크숍은 원조와 개발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가 '인권'임을 전 세계 시민사회가 재확인하고, 원조총회의 협상 테이블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Dignity International의 발제자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RBA)'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정부가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부산총회와 같은 협상 자리에서는 인권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돈이 없어서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군대와 무기에 쓰이는 예산을 보건과 교육에 우선적으로 쓴다면 인권증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니카라과에서 온 한 참석자는 독재정권이 물러난 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니카라과의 예를 들며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 전환기에 있는 니카라과에서 개발(Development)은 혁명(Revolution)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 건강, 양질의 일자리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과 시민들의 참여가 바로 개발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포럼아시아 발제자는 개발효과성이 인권증진이라는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문서가 바로 25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발전권 선언' 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부들이 자국에 돌아와서는 반인권적인 개발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참여연대의 박정은 팀장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파병이 어떻게 원조사업으로 포장되는지 폭로하는 것을 통하여 원조의 군사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분쟁국 · 취약국에서 원조 활동을 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인권적인 측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3

누구의 주인의식이 중요한가?

권유선 ODA Watch

ODA Watch와 글로벌발전연구원(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ReDI)은 "Whose Ownership Matters? Development Results & Accountability for People: From CSO's Perspectives"를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Reality of Aid(RoA), 방글라데시의 VOICE(Voice for Interactive Choice & Empowerment, 이하 VOICE)와 스위스의 Aid Rating, CSEND가 참여하였다.

ODA Watch 대표와 ReDI 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태주 교수는 "Ownership, the Core Value of Development?"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이 워크숍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민주적인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그러한 점이 담보될 때만이 개발 성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을 여러 단체의 경험 나눔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2부에 진행된 ODA Watch의 한재광 사무총장과 VOICE의 Ahmed Swapan Mahmud 대표가 발표한 방글라데시-한국 ICT 원조평가 관련 사례공유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원조 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한 결과로 설명함으로써 높은 설득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발표를 맡았던 ReDI의 홍문숙 정책연구실장은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Whom? : The Ownership of Development Results"를 통해 공여국 중심의 성과 관리 및 달성은 사람 중심의 개발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개발의 성과 자체가 파트너국가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개발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의 전 과정에 다양한 개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평가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120여명의 참가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민주적 주인의식과 개발 성과에 대한 책무성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제는 단순히 '원조의 효과성 제고'가 아닌 '사람'이 국제 개발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 많은 기관과 활동가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크숍 4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원조

서은교 월드비전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는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원조(Effective Aid for Better Health)'를 주제로 보건 및 물과 위생 분야에서 원조효과성의 중요성에 대해 KoFID 보건분과와 Busan Health Working Group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원조 효과성의 원리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된 사례에서 도출된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IHP+(International Health Partnership)를 소개하며 보건 영역의 원조 효과성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2007년 세계 43개국 및 12개의 국제기구들과 함께 시작된 IHP+는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효과성 증진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으로 만들어져 각 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IHP+가 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모잠비크는 공여국을 초청하여 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지원하도록 하고, 글로벌 협약을 적용하여 국제적 파트너쉽이 보건 원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월드비전은 보건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참여와 옹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원조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상호책무성 담보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설사병이며 90% 이상이 오염된 물로 인한 것이다.

WaterAid는 2015년까지 물과 위생에 대한 MDGs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산총회에서 물과 위생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촉구, 국제전략 상의 문제점 지적, 정치적 행동 촉구 등의 공동노력을 약속하였다. 끝으로 African Network of Academics는 원조의 주인의식과 그 효과성에 대한 아프리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보건 원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 많은 참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워크숍 5

'시민사회단체(CSOs)의 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조성 – 도전과 응전'

김나연 월드투게더

옥스팜,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CIVICUS 등의 공동 주관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조성 – 도전과 응전 (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Civil Society – Challenges and Responses)'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의 세션1에서는 UN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캄보디아 협력위원회(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이하 CCC) 대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개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우호적인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나누었다.

특히 CCC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NGO 관련법으로 인해 캄보디아 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간접적인 탄압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사례는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은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며,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역시 보장해주지 않으면 인간 중심의 개발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어서 워크숍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각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제약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션 2에서는 부산총회에서 시민사회의 입장 전달을 위한 협상 목표와 공동 전략을 수립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옹호사업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대한 공동 인식이 있어야 하며, 성격을 달리하는 두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연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달성해야 한다는데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KoFID 주제분과

2011년 6월부터 KoFID는 CSO 개발효과성,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인권과 개발, 젠더와 개발, 보건, 환경을 주제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분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는 주제별 주요 개발협력 이슈를 연구하고 국제기구와 공여국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KoFID와 글로벌발전연구소ReDI는 그 동안의 분과 활동 결과를 이슈 브리프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집호 주제분과 섹션에서는 이슈 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이슈 브리프 전문은 KoFID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ofid.org

이슈 브리프 1호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개발원조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개발원조가 양의 문제에서 질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여국간 원조를 점검하고 공여국과 파트너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파리선언이 2005년에 탄생하였다.

파리선언은 효과적으로 원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질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다. 2008년 OECD 제3차 고위급회담인 아크라회의에서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했고 이후 2010년 파리선언 이행 약속 시한이 종료 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모았던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만으로 지금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한계점만을 드러냈다.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이행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파리선언의 이행 지표가 달성되었더라도 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원조'가 '개발'을 달성하는 무수한 요소들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개발'이라는 논의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번 부산총회는 원조의 효과만을 논하는 한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이슈 브리프 2호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쉽 시대는 오는가?

'공여국이 제공하고 수원국이 받는' 형태의 전통적인 국제원조체제는 파트너국가의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국제원조는 국제적으로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며, 원조 양의 확대와 원조 재원의 공정한 배분에 실패하였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원조 조화의 실현, 상호책무성 강화 등의 파리원칙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2008년 아크라 회의부터 개발협력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공여국과 수원국 중심의 원조체제가 다양한 주체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에 기반한 파리선언의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십 여년 전부터 국제 원조 환경 변화에 따른 포괄적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쉽이 주목을 받고 있다. DAC회원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서구 공여국 외에도 Non-DAC 공여국, 남남협력 국가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국제개발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OECD 등 국제기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민간재원 특히 기업과 민간 재단들의 등장이다. 시민사회 또한 그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시민사회의 재원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도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파트너가 다양화된 만큼 원조의 분절화 심화 문제가 생김으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본원칙과 국제 기준에 따라 개발원조를 이행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쉽은 수원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슈 브리프 3호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이슈와 과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발환경 조성과 국제개발협력 노력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은 선진국 및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개발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정책일관성은 국제개발 정책 간 조화의 실현과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다. 정책일관성이란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들 간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의미한다. 정책일관성은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하거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파트너 국가의 정책공간을 확장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세계화가 촉진되면서 단순한 재원 이전의 극대화 혹은 원조체제 개혁 등 원조 중심적인 대안을 넘어 개발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통합적 정책개혁이 필요하다.

부산총회는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구조적 실업을 고착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1986년 UN 발전권 선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특수한 개발경험을 보유한 나라이다.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개발과정은 개도국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스스로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친근감이 배신감으로 변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총회를 계기로 정책일관성의 관점에서 개발원조 정책 및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슈 브리프 4호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국 개발 경험 뒤집어 보기

부산총회를 개최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크다.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OECD DAC 회원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사례는 전 세계에 유용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은 '부산총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개발원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와 나눌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러 파트너 국가들도 한국의 개발경험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OECD,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선진국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로서 개발협력체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개발경험 공유 노력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만을 부각하여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과정을 공유하기 보다는 경제성장과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지정학적 ·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90% 가량을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원조는 각각 냉전 체제하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지정학적인 원인과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소수 공여국의 집중적인 원조는 분절화에서 오는 문제를 크게 야기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원조는 정부에 집중되어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른 우선순위 분야에 원조를 활용하여 분절화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파트너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오늘날은 한 국가 안에 다양한 공여국의 부처와 기관들, 민간 단체 등이 산발적으로 원조를 제공하여 분절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개발경험은 한미관계,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당시의 국제 정세와 시대적 특수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재 파트너 국가들이 처해있는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도 군부독재로 일컬어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쉽을 현재 파트너국에 전수하려는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슈 브리프 5호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보건 분야의 원조효과성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로서 보건원조는 전체 ODA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G8 정상회의에서는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보건 증진을 위해 2015년까지 총 73억 달라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약속하는 '무스코카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보건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 증가는 국제기구와 공여국의 MDGs 달성 노력에 힘입은 결과이다. 그러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절화, 원조 사업 수행 시 파트너 국가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부재, 단기적인 지원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부재, 민주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보건 문제의 현실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다. 한국의 보건ODA도 동일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KoFID 보건분과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정부와 부산총회에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슈 브리프 6호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개발효과성이다.

KoFID 인권분과는 과거 한국에 제공된 ODA가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면서 민주화와 노동, 인권, 환경, 성평등 등 국내 시민운동의 자양분을 제공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했음을 크리스챤 아카데미와 한국 YMCA, YWCA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위해서 파트너 국가 정부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적이고 민주적인 주인의식'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개발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제 원조 수혜자들의 주인의식을 기르고, 궁극적으로 국가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수원국이였던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에서 도출된 중요한 교훈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은 파트너국의 자력화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이르기까지 고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공여국인 한국 정부는 한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파트너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슈 브리프 7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의제와 논의과정

부산총회에서는 파리선언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부산총회가 이전의 원조효과 고위급회담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선진 공여국 중심의 논의과정에 개발협력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파트너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으며, 민간 행위자들까지 부산총회의 논의과정에 등장하면서 새롭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시민사회는 부산총회 결과문서 작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CSO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및 국제적 프레임워크 등 시민사회의 주요 주장을 다수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가 한국 주도의 새로운 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는 계기이며 기존의 원조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포괄적 개발이슈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총회는 의제 설정과 협의의 과정에서 2005년 이후 어떤 때보다도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부산총회는 기술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숙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원문확인 : KoFID 주제분과 입장문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시민사회의 활동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1월 29일 ~ 12월 1일 부산 벡스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9 Nov.–1 Dec. 2011, Busan, Korea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1월 29일부터 3일간 170여개 국가의 총리 및 장관급 대표단, 78개 국제기구와 세계시민사회대표, 학계와 민간기업 등에서 25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는 이번 부산총회가 규모와 회의의제 및 성과에 있어 역사적인 개발원조총회라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KoFID의 파트너쉽과 기여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총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대중과 소통하려고 하였다.

부산총회는 3일간의 전체회의, 주제회의, 개회식, 폐회식,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에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의 이행을 평가하고 원조효과성 증진 노력을 점검 하였다. 둘째 날에는 부산총회 이후의 전략을 위한 빌딩블럭 논의가 이어졌다. 빌딩블럭은 부산총회 결과문서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슈별로 참여를 원하는 주체들이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빌딩블럭은 다양한 주제와 행위자를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서 적용이 용이하여 기존의 관행을 넘어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날 장관 및 각료급 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개발협력 파트너쉽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선언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와 UN WOMEN 공동 주최로 양성평등에 대한 특별세션도 진행되었다. 마지막인 셋째 날에는 포스트 부산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부산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쉽"이 발표되었다.

미디어 스턴트

무너지고, 병들고, 후퇴해버린…… 원조를 살립시다!

– 시민단체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일에 원조 약속 이행 촉구하는 퍼포먼스 펼쳐

11월 29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을 맞아 국제개발분야에서 일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은 총회가 열리는 벡스코 앞 광장에서 선진국들의 원조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전 세계 700여 개 국제개발단체의 네트워크인 BetterAid와 한국의 KoFID, 그리고 옥스팜,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등 모두 6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미디어 스턴트는 옥스팜과 ODA Watch의 "원조 약속이 무너진다"로 시작됐다.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분장한 사람들이 원조 약속의 탑에서 약속이 적힌 벽돌을 빼자 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행사는 6년 전 보다 효과적인 원조에 집중하겠다던 원조 공여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다 심지어 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최근의 행태를 풍자한 것이다. 공여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퍼포먼스는 "세상을 지키는 원조,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무리됐다.

바로 뒤를 이어 진행된 세이브더칠드런과 월드비전의 퍼포먼스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행동, 건강한 원조"가 핵심 주제였다. 목발 위에 올라타 2m 크기의 거인 환자로 분장한 '병든 원조'들이 등장해 비틀거리자, 원조 받는 나라의 아이들로 분장한 사람들이 다가가 대형 알약을 건넸다. 거인 환자들이 캡슐을 열자 '사람 중심의 원조' 등 건강한 원조를 위한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여전히 해마다 760만 명의 아이들이 5세가 되기도 전에 숨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탁상공론을 접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마지막으로 BetterAid와 KoFID 소속 회원들 30여명은 광장에 함께 모여 요요(yo-yo)를 하며 공여국 정부들이 했던 숱한 원조 개선 약속과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감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퍼포먼스는 공여국 정부의 효과적 원조에 대한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KoFID 기자회견

한국 시민사회,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사람 중심의 개발원조"를 말하다.

KoFID는 이번 부산총회를 맞아 행사장인 BEXCO 미디어 센터에서 11월 30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국제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기치아래 진행되고 있는 부산총회의 의미를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리하고, 이에 앞서 열렸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결과를 소개하고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KoFID 홍보위원장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민경일 상근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KoFID의 조직위원장인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KoFID 정책위원장인 ODA Watch 이태주 대표와 함께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의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한비야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의 조직위원장이기도 했던 이성훈 이사는 이번 부산총회에 대해 "OECD 틀 내에서만 진행되어오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시민사회와 신흥 공여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다자간 협의의 장이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재원 확대와 평가지표, 목표실현 기한 설정 마련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실행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면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이태주 대표는 "기존 유럽 선진국들뿐 아니라 유엔, G20, 신흥 공여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데에 한국 정부가 큰 기여를 했고, 인권과 성평등 같은 핵심 논의들이 주요 의제로 반영되는 데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부처와 외교부처 간 갈등과 부처간 업무중복 등 분절화, 원조 구속성을 해결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 기본적 인권 이슈를 부산 총회의 주요 의제로 강조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99%를 위한 정책이 미흡한 점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 약속을 얼마나 신뢰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비야씨는 다년간 국제 구호 현장에서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잘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파리선언의 이행지표에서 한국이 거의 꼴찌"라고 지적하면서 "잘 주는 나라란 제대로 주는 나라, 따뜻하게 주는 나라, 그리고 주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의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끝까지 살펴 보는 것이 이 약속을 잘 지키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부산총회는 젠더 문제를 의제로 반영하는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으나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이자 원조효과성 증진의 중요한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이번 총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동시에 인류 전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KoFID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원조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원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 기고문 · 이태주 KoFID 정책위원장

부산총회를 다시 생각한다!

이태주_ ODA Watch, KoFID

모든 어려운 합의를 6개월 연장한 채로 부산총회는 끝났다. 언론이 '개발원조의 올림픽' 이라고 부를 만큼 화려했던 최대 최고의 메가 이벤트가 잘 끝났다. 글로벌 개발 파트너쉽을 위해 남반부와 북반구 국가, 공여국와 수원국 구분 없이 모두 한 배에 승선시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향해 출항을 성공시킨 우리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KoFID는 성대한 말 잔치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6개월이 부산총회의 진정한 막후 정치와 실질적인 협상의 시작이라고 보고 나침반과 항로를 점검할 것이다. 그간 세계 시민사회와 개별 NGO단체들, 지역조직들의 부산총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주문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미완의 과제를 미완으로 끝냈다는 점이다. 그 만큼 많은 숙제를 남기고 부산총회는 폐막되었다.

첫째, 부산총회는 원조에서 개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었고 파워 시프트만 목격 되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대국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OECD/DAC으로 대표되는 서방 중심의 원조 독점 블록이 깨졌다. 중국과 남남협력 국가들은 서방 원조를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쉽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였다. 때문에 향후 6개월 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여국들이 부산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지표 마련과 포스트 부산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합의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둘째, 부산총회에서 공여국들은 '이제 원조는 끝났다' 라고 선언했지만 지구촌 공공재로서 ODA를 대체할 개발재원을 마련할 책임을 회피하였다. 재정,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양극화와 실업 등 글로벌 다중 위기를 해소할 재원 마련을 더 이상 약속하지 못하고 남남협력과 신흥경제국, 민간부문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였다. 특히 거의 무임승차로 평가되는 민간부문이 리스크가 크고 투자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최빈국과 취약국, 분쟁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얼마나 동원될 수 있을 것인가는 남겨진 숙제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찬사와 기대가 많았지만 과연 ODA를 대체할 정도로 민간재원이 지구촌 10억 극빈층의 삶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하는 의문이 남는다.

셋째, 부산선언은 부산정신이라 할 만한 지고하고 다양한 원칙과 이념을 담고 있다. 포괄성과 민주성, 투명성, 다양성, 책무성, 파트너쉽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르고 정의로운 개발협력의 정신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파트너 국가에게 부여된 무거운 책임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공여국들에게 부가된 가벼운 책임도 모두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물론 부산선언의 합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우리 정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몇 안 되는 시한부 약속들–2012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다자기구와, 글로벌 펀드 및 글로벌 사업들에 대한 정책 일관성 제고 공동 노력 가이드라인과 원칙들(25b), 2013년까지 3–5년간의 중기 예산 집행계획과 실행계획이 유용하게 정기적으로 적시에 제공' (24a), 2012년 12월까지 재원에 대한 적기에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전자 공시하기 위한 공통의 공개적 기준 마련에 합의(23c), 2013년까지 파트너국 주도의 조정 체계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합의(25a)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부산선언이 정말 역사적인 선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선언인가' 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外華內貧(외화내빈)이고 一口二言(일구이언)하며 言行不一致(언행불일치)하는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개발원조의 분절화와 비효율이 극심하고 원조의 질이 매우 낮으며, 자원협력과 경제협력을 개발협력과 구분하지 못하고, 파트너의 필요보다는 자국 중심의 원조 관행이 만연하고, ODA 정보와 재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정책 일관성을 고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주소를 생각하면 부산선언의 모든 것이 부끄러워진다. 시장과 거대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공생발전, 공정사회가 말뿐인 현실을 생각하면 지구촌의 양극화 해소와 빈곤퇴치, 불평등 완화를 주창하는 거창한 美辭麗句(미사여구) 부산선언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부산총회는 이제 시작이다. 수사에서 실천으로, 담론에서 현실정치로 부산정신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성평등 특별세션 · 조영숙 KoFID 운영위원

여성의 권리에 대한 '후퇴'가 우려된 부산총회의 젠더 협상

조영숙_ 한국여성단체연합, KoFID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G20 Summit)와 2011 년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과거 서구중심의 원조이데올로기가 '글로벌 남반부'에게 전파된 국제개발원조의 역사와 이에 대한 국제여성운동의 개입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있었다.

부산총회에서는 젠더(gender)의제를 결과문서 제 20 조에 포함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이 참석한 젠더 특별 세션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제안한 성평등과 개발에 관한 부산공동행동계획(Busan Joint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부산글로벌여성포럼에 참석한 국내외의 여성운동가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우려는 대개 국제사회에서 젠더, 인권, 환경 등 글로벌 남반부의 시선에 입각한 대안담론이 글로벌 선진국이 주도하는 주류 경제성장담론에 패배할 경우 발생한다.

우선, 원조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지난 2010 년 G20 서울회의 당시,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주최 워크숍에 참가한 이창용 단장은 '개발의제에서 젠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G20 은 젠더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젠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얼마나 협소하며, 또한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준 바 있다.

반면, 2011 년 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WP-EFF)회의를 담당한 외교통상부는 여성의제를 부산결과문서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획재정부에 비해 외교통상부가 개발의제에 대한 인식이 진일보하였음을 보여주는 듯 했다. 비록 부산총회 결과문서를 논의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부재하던(absence) 젠더 의제가 가시화(visualized) 되긴 했지만, 부산총회와 같은 방식의 젠더 의제화가 실제로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impacts)을 미칠 것인가라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산총회과정에서의 젠더 의제화는 매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젠더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금전적 수입이 보장되는 생산영역과 금전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무불노동으로 간주되는 재생산 또는 돌봄 영역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개발과정에 참여한다 해도 성불평등과 성 격차는 줄어들지 않음을 한국의 개발경험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개발과정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젠더 관계의 평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국제여성운동은 지난 70년대 이후 유엔을 통해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권리에 중심을 둔', '젠더 권력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개발을 각국에 원칙적으로 확립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성 주류화를 외면하더니, 여성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는 방식으로 젠더의제를 개발협력 논의과정에 포함시킨 부산총회의 젠더 협상과정에 대해 여성들이 성장과 개발의 '도구'로 여성을 대상화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부산글로벌여성포럼이 발표한 정치선언문에 따르면 여성들은 "개발은 권리이며, 불평등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분명히 제기하고 있으며, "여성이 불평등하고 지속적이지 않는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과정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이 아닌 인권중심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OECD 가 아닌 유엔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정부가 부산결과문서의 제 20 조에서 다루고 있는 젠더 관련 의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시키려는 의도로 제안한 글로벌 젠더행동계획 초안은 대부분의 여성포럼 참석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된 것 역시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여성인권의 기본 프레임이라 할 있는, 북경행동강령, 여성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1820, 1880, 1889 와 같은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여성인권협약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보이지 않은 행동계획은 여성들이 과거에 투쟁을 통해 확보해 온 정당한 권리조차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권리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처음에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자고 제안했던 일부 참석자들조차도 나중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으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APWLD, AWID, FEMNET, WIDE, Coordinadora de la Mujer/Bolivia 등 BACG 에 참여한 여성그룹의 명의로 발표된 행동계획에 대한

입장문서를 보면 비판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 "우리는 현재의 형태로 이루어진 행동계획 초안을 인정할 수 없다. 현행 행동계획은 기본적인 인권과 실질적인 평등을 충분히 향유하는데 있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경제성장과 개발의 융합을 우려하면서 주목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게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다양한 여성의 권리는 여성창업과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여성단체들은 위의 접근이 불평등과 권리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고 하지만, 젠더의제 만큼은 개발과정에 여성이나 젠더가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성운동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성, 인종, 계급 등을 망라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일국의 경계에 매몰되지 않은 글로벌 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젠더관계의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현실정치를 통해 국가정책에 포함된 성 주류화 정책은 '빈곤의 여성화', '재생산/돌봄 노동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 라는 글로벌 성 불평등과 성별 위계구조는 그대로 남겨둔 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료(femocrat)에 의한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과 개발기구의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개발페미니즘(development feminism)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왔다. 향후 원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향한 개발협력구조의 전환을 추구하는 젠더 담론과 현실정치 속의 젠더 정책의 한계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2012 년 6 월에 개최될 예정인 유엔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Forum)과 리우+20 회의를 통해 이어져나갈 전망이다. 2012 년에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젠더, 환경, 인권이 크로스 커팅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한국사회에서도 풍부하게 전개되어, 부산총회에서 논의된 젠더의제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총회 결과문서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쉽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총회의 주요 의제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교훈 그리고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약속과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부산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1일 마지막 조율 과정까지 무수한 협의와 개정을 거쳐 부산총회 최종 결과문서가 발표되었다. 부산총회 결과문서는 국제사회가 개발을 위해 추구해야 할 원칙인 주인의식과 성과중심의 개발협력, 포괄적 개발 파트너쉽, 투명성과 상호책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달성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파트너국의 개발 관련 기능 강화와 정책을 위한 지식공유를 약속하고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민간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부산총회 이후의 개발협력 체제는 파트너국의 현장 중심 개발원조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

원문확인 : 부산 파트너십 원문

ODA Watch – 공여국과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역사적이나, 가벼운 공약! 공여국과 한국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1. 공여국들은 원조 증액과 효과적 개발을 위한 약속을 우선 이행하라!
2. 공여국의 원조 실패 책임을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전가하지 말라!
3. 정부는 국내에서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과 사람 중심의 포용적 개발정책을 실천하라!
4. 공여국들은 글로벌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조예산과 복지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화하라!
5. 한국 정부는 원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절화 극복과 원조의 비구속화 등 국제사회의 규범과 약속 이행 및 실천에 모범을 보여라!

KoFID논평

●● 부산총회 그리고 결과문서에 대한 KoFID의 논평

1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시민단체의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이하 코피드)은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쉽"이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부산총회에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2005년 파리선언에서 시작된 원조효과성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조를 '효과적인 개발'의 일부로 확대, 심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뛰어넘어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여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구적 파트너쉽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발협력주체의 다각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없어 확대된 파트너쉽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고 말 것이 우려된다.

3 코피드는 이번 부산결과문서에 다음과 같은 진전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한다.

- 민주적 주인의식 (democratic ownership) 강화
- 개발원조에서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여 인정
-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의 언급 (22조)

4 그러나 코피드는 아래의 분야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점.
-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했고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이 포함되긴 하였으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시민사회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언급된 점
- 글로벌 파트너쉽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개발원조 금액이 축소 및 동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원조 증액에 대한 약속이 없음
- 원조효과성과 효과적 개발 증진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을 위한 지표를 제정하지 못하고 미래의 과제로 연장한 점
-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며,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5 코피드는 또한 성 평등이 부산결과문서에 포함되었으나 여성을 인권의 관점이 아닌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6 코피드는 특히 11월30일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의 민주화는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국내외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7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개발원조 증액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증액 약속 못지 않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개발 정책의 질적 개선이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의 분절화, 과다한 비구속성 원조의 문제점 등 개발의 국제적 규범에 뒤쳐진 국내의 개발원조 정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8 코피드는 이번 부산총회의 주최국인 한국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산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코피드는 향후 한국 정부가 부산 파트너쉽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 시민사회단체의 논평 : 이슈 브리프 8호 _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 결과와 전망

시민사회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진전이 있었던 부분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파트너들의 참여가 강조되었다는 점과 글로벌 개발 파트너쉽의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책임과 참여를 촉진한 점, 불평등 해소와 인권 존중, 성평등 등 개발의 공동 원칙을 강조한 점, 민주적 주인의식을 강조한 점,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언급한 점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언어들이 대거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 되었다. BetterAid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개발협력의 목표로 상정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계획이 없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일반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언급되었음을 한계로 보았다.

원문확인 : 시민사회단체 입장문서 모음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2층 121-887
Tel: 02-2279-1706 **Fax:** 02-2279-1719
Email: kofid21@gmail.com **Web:** www.kofid.org